



국토교통부

보도 설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2. 11. 11.(금)			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	김민태 (044-201-3970)
	철도운영과	담당자	사무관	김광수 (044-201-4636)
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장원 (044-201-460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‘안전 인력 요청 묵살한 국토부’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.

< 보도 내용 (노컷뉴스, 11.11) >

◆ 안전 인력 요청은 ‘묵살’...코레일에 책임 미루는 국토부

- 국토부는 코레일에게 모든 책임 추궁,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
- 지난 5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 연평균 1486명 요청했으나 274명만 증원

□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,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요청한 연평균 1,493명의 인력증원 중 274명이 증원되었습니다.

○ 이는 미개통 노선에 대한 요구, 중복인력,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인력 대체 등 불요불급한 증원소요를 제외하고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며, 국토교통부는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예산 등 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.

* 안전예산 : ('18) 1.1조→('19) 1.3조→('20) 1.7조→('21) 2.0조→('22) 2.1조→('23 정부안) 2.3조

사업종류 : 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, 철도안전및시설개량,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등

□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, 코레일의 인력운용,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

○ 아울러,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시설노후화, 인력운영부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, 철도경찰,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조사 중으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.